



줄푸세의 군사적 집행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집중 해부

2014.02.27 | 정태인_새사연 원장 | ctain60@gmail.com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대통령의 본령인 “줄푸세”를 군사작전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가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신비의 묘약으로 등장했다.

또 다시 줄푸세

[표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개혁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 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사업 등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공기업 퇴직 임직원 협력업체 취직 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금지 공기업 입찰비리 발생 시 해당 기업 입찰 업무 조달청에 위탁
혁신경제 구축	중견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벤처창업에 4조원 지원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7600억원 확충 한국형 요즈마펀드(해외자금 모아 국내 기업 투자) 조성
내수·수출 균형	가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포인트 인하 상가 권리금 보호, 분쟁조정기구 설치 장기주택자금 공급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위의 표는 그럴 듯하다. 혁신경제구축은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돈을 펴부어 또 한 번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내수수출 균형 부문의 “가계 부채 비율 5%p 인하”, “상가권리금 보호” 등은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솔깃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 “3대 핵심 전략” 어디에서나 강조한 가장 중요한 어휘는 이 표에서 찾을 수 없다. 바로 규제완화(규제개혁이라고 표현했다)다. 규제완화만큼 이번 계획의 핵심을 보여주는 낱말은 없다. 규제완화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신비의 묘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는 아예 규제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렸다. 규제 총량제(한 분야의 규제를 늘리면 어디선가 그 만큼 줄인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자동 효력 상실제”¹⁾(과거에 일몰제로 불리었다)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규제 장관 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직접 챙겨나갈 것”이란 점이다. 박대통령과 관료들 간의 관계로 볼 때 역대 정부 중 가장 포괄적이고 신속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성장의 항목에서 규제완화가 특히 강조된 이유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내수를 확대하려면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건 곧 서비스 부문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가 핵심이 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규제란 공공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 정책은 공공성 파괴를 통해 재벌에게 황금알을 낳는 분야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시 줄푸세다. 다만 달라진 것은 이번엔 “474” (“잠재성장율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율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라는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아버지 박정희식 “계획”의 방법으로, 즉 군사적으로 실천하고 말겠다는 의지이다.

민영화의 가속화

첫 번째의 “공공부문 개혁”은 곧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부패를 강조해 광범위한 분노를 유발하고 그에 기초해서 민영화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의 사례를 열거하고 나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1)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행 일몰제’ 보다 강력한 규제 철폐 방식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쟁원리 도입=민영화 공식은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서 발 KTX와 같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사례를 항만 등 다른 공공 부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여전히 공공부문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사족을 붙였지만 말이다.

그의 말 그대로 수서 발 KTX는 네트워크산업(전기, 가스, 우편, 철도, 수도) 민영화의 전범이 될 것이다. 일단 돈이 되는 알짜배기 부분을 분리해서(기업분할과 자회사) 공기업 내 경쟁체제를 만든다. 특정 시점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이 자회사를 시장(네트워크 산업의 자산규모로 봐서 사실상 재벌과 외국 자본)으로 넘기면 민영화가 완성된다.

그 이유는 “방만한 경영의 결과인 공기업 부채”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공언한 부채비율 200%를 맞추려면 상당한 자산을 팔아야 한다. 민자로 건설한 인천공항철도가 천문학적 적자를 거듭 내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코레일이 인수했지만, 어느 덧 이윤을 내기 시작하자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대표적인 민영화 상품으로 시장에 내 놓기로 했다. 역시 과도한 코레일의 부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란다. 인천공항철도는 이번 담화문 뒤에 올 두 번째 단계의 전범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산업의 특징은 바로 네트워크에 있다. 예컨대 철도, 전기, 우편은 전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 네트워크의 허브, 즉 수도권은 수익성이 높지만 인구가 희박한 시골로 가면 당연히 수익성이 형편없다. 허브 부분만 따로 떼어 팔아버리면 나머진 어떻게 될까? 과거엔 수익성 높은 부분의 이익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조금을 주었다. 이 교차보조금 덕에 시골까지 기차가 가고 전기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알짜 부분이 민영화되면 민간 기업이 낙후 지역에 교차보조금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 결국 지방 노선은 없어지고 만다.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의료민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던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가 인상을 기대하면서 슬쩍 목소리를 낮췄다. 박대통령은 한걸 자신감을 얻은 모양이다. 이번엔 경제자유구역에 세우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건 현재의 외국인 의사 비율 10%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이라는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즉 영리병원을 세우고 싶으면 약간의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의사만 갖추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 완전 자유화이다. 우리나라에는 경제자유구역이 각 도에 8군데나 된다.



경제자유구역은 한미 FTA에서 미래유보의 예외에 속한다. 미래유보란 언제든지 규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 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푼 영리의료법인 자유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의 민영화/규제완화를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서 일제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년 묵은 숙원을 드디어 풀었고 한국 공공서비스부문에는 조종이 올랐다.

가계부채는 줄어들까?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세 번째 전략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이다. 드디어 내수 확대에 눈을 돌렸으니 말이다. 새사연은 이제는 내수가 주도할 때라는 요지의 거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내놓은 바 있다. 박대통령이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새사연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나아가서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 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목표까지도 정확히 일치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도 지원한다는 것도 찬성한다. 하여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할 때는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줄에서 박대통령은 전세 값 상승도 잡아내겠다며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를 열거하고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 여전히 “돈 빌려 집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담화문엔 나오지 않지만 정부의 회의에선 가격대비 대출비율(LTV)²⁾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³⁾를 “현실화”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시장의 마지

2)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동의어.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 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3)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막 대못”을 빼는 거라고 환호성이 일었다. LTV와 DTI란 돈을 빌릴 때 집의 가치와 소득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규제이다. 덕분에 우리 부동산 거품이 그래도 덜 부풀어 올랐고 지난 금융위기 때 타격도 한결 덜 했다. 신현송 현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경제보좌관을 하면서 LTV를 세계에 자랑한 적도 있다.


박대통령의 의도는 물론 이걸 풀어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부동산경기를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는 생각 밖에 없다. 일단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빚지고서라도 집을 사려고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럼 당연히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2년 말 가계부채비율이 급증한 것도 부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때문이었다.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에서 경기정책과 서민보호정책이 맞부딪힐 때 훨씬 더 힘을 발휘한 것은 경기대책이었다. 즉 이러저러한 가계부채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하나만으로도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인 사실

박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담화문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두 번째 항목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에서 박대통령은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되어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확인 사살했다.

복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세 번째 항목,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 흔적만 찾을 수 있다. 물론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이외의 복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복지는 대통령이 원하는 내수확대의 핵심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보수 언론이 “백화점식”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정책이 제시됐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 중기적으로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의한 투자촉진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것이 “줄푸세의 군사적 집행”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2014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4년 2월 2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1/14	출산 포기는 불안한 미래에서 나온다	이은경
이슈진단	2/13	강화되는 경기회복세, 새로운 위기?	정태인
이슈진단	2/21	거대공룡 몸집 불리는 다섯 가지 방법	이은경
이슈진단	2/26	줄푸세의 군사적 집행	정태인